

혁신도시 행정 - 주민 핫라인 구축

전주시, '상생 다올마당' 운영... 정주여건 개선·주민 요구사항 건의·의견수렴 수렴 통로 역할

전주시가 혁신도시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주민들이 요구사항을 건의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기로 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행정과 주민간의 소통강화로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각종 사업추진 과정에서 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입주자 대표와 통장대표, 마을주민협의회 대표 등 주민대표 14명과 전주시 기획조정국장, 완산구청장, 덕진구청장 등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상생 다올마당을 구성, 운영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상생 다올마당 위원들은 앞으로 행정구역 조정 문제와 체육센

터 건립, 동 주민센터 건립(동 신설시) 등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현안사업에 대해 다양한 논의를 이어가게 된다.

또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 역할로서 주민들이 개선을 요구한 사항을 시에 건의하고, 혁신도시 내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 사전 의견수렴 수렴 통로 역할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시는 혁신도시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도시 주민불편해소 TF단'을 구성하고 그간 수차례에 걸쳐 주민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각종 현안 등에 대해 논의해 왔다.

그 결과, 주민대표들이 해결을 요청한 16건의 건의사항 중 혁신도시 아

파트 하자관련 전문지원단 구성 지원 요청, 혁신도시 버스 승강장 LED조명 설치 및 버스 배차간격 단축 요청 등 9건을 처리 완료했다.

또, 혁신도시 입구 상징조형물 대체화단 및 꽃동산 조성, 혁신도시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 등 4건의 건의사항을 처리 중이다.

뿐만 아니라, 시는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당초 전북혁신도시 입구 도로변 교통섬에 설치된 전북혁신도시 상징물(안내표지판)이 차량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철거됨에 따라 지주형 안내판 형태의 새인물을 제작해 연내 설치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는 혁신도시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직원, 전주시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혁신도시 주민 화합

한마음대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나아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주도해온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에 참석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국·도비 지원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수도권 신설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추가 이전 등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기도 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혁신도시는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및 성장동력"이라며 "혁신도시 주민과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 공공시설도 확충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주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14일~18일까지 80명

전주시는 취약계층을 위한 희망의 일자리를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각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에서 모집한다.

이번 4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총 참여인원 80명으로, 오는 10월 10일부터 12월 15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일반노무와 행정업무로 나눠 담당하게 된다.

주요사업 내용은 DB구축지원, 서비스지원, 환경정화, 기타사업 등 4개 분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인자로 실업상태이거나 정소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권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재학생(야간대, 방통대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

법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정소소득이 있는 자녀 그 배우자, 공무원 가족(배우자 및 자녀),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등은 사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근로사업의 선발 여부는 오는 9월 28~29일 2일간 개별 통보하며, 참여자의 노임 단가는 보통 65세 미만 단순노무의 경우 간식비 등 부대비용 포함해 1일 41,820원, 근로시간은 주일 근무, 1일 6시간이다.

김봉정 창업청년지원과장은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라며 "특히 저소득층과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창업청년지원과(281-2555)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완산경찰, 사회적 약자 보호 합동캠페인 실시

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7일 평화동 일대에서 사회적 약자보호 및 청소년 선도를 위한 경·관·민 합동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완산경찰서,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전주대학교 캠퍼스폴리스, 영생고등학교 등 50여 명이 참석해 4개조로 나눠 전도폭력 근절 등 3대 치안정책 홍보와 방학기간 청소년 달선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

또한 여성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법 및 카메라이용 활용 등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함께 가정폭력과 학대 신고활성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강황수 완산서장은 "완산경찰은 3대 치안 정책 적극 추진으로 여성·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낮잠이 최고 하늘이 흐리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8일 오후 공원을 찾은 시민이 낮잠을 자고 있다.

'장학금 강요 혐의' 정현율 시장 무혐의 처분

(익산시)

검찰, '협박 사실 없다 골재채취업자 B씨 진술 확보·공무원 A씨와 공모 증거 없어'

익산시 공무원 뇌물수수 등의 사건과 관련해 장학금 강요 혐의로 입건된 정현율 익산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전주시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윤철민)는 8일 뇌물수수 및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치된 정시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구속된 익산시 간부 공무원 A씨를 통해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골재채취업자 B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기탁하도록 강요하고 1,000만원을 쟁긴 혐

의를 받고 있었다.

또한 다른 공무원을 통해 다른 골재채취업자 C씨에게 장학금 2,000만 원을 기탁하도록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검찰은 1억 원 강요의 경우 정 시장과 간부 공무원 A씨로부터 직접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는 골재채취업자 B씨의 진술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또한 정 시장과 간부 공무원 A씨가 B씨를 통해 뇌물 받기 위해 공모했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골재채취업자 C씨가 정 시장이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익산시 산하

장학재단에 2,000만 원을 기탁한 사실을 정 시장이 모르고 있었고 조사과정에서 알게된 점을 감안해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관계자는 "정 시장에 대한 수사결과 관련자들이 업자와 간부 공무원 A씨가 관련 사실에 관해 협박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

한편, 간부 공무원 A씨와 골재채취업자 B씨는 1,000만원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이삼민 기자

남원시 권총 실탄 20발 발견

남원의 한 야산에서 권총 실탄 20발이 발견됐다.

8일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8시 55분께 남원시 석정동의 한 도로변에서 38구경 권총 실탄 20발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제초 작업을 하던 남원시 소속 A(63,남)씨는 실탄이 들어있는 종이 상자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군당국은 실탄을 수거하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삼민 기자

'재량사업비 브로커'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구속기소

재량사업비 편성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하던 한 인터넷매체의 전 본부장이 구속기소됐다.

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지난 7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전북 모 인터넷매체 전 본부장 A(54,남)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의료기기와 배관설비 등 관련 공사 3개 업체 관계자들에게 "지방의원들의 재량사업비 공사를 맡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2억 5,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A씨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하드디스크와 핸드폰 등의 자료들을 압수한 바 있다.

또한 A씨가 의원들에게도 돈을 건넬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검찰관계자는 "향후 수사결과 의원들에게 돈을 건넨 사실이 확인되면 뇌물공여 혐의를 추가해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재량사업비와 관련해 지난해 말부터 4차례에 걸쳐 전북도의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삼민 기자

전북 모 대학 축구부 감독,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전북의 모 대학 축구부 감독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불구속 혐의로 입건됐다.

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대학 축구부 감독 A(54)씨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28일 이후부터 올해 2월까지 월급과 관공비 명목으로 3,500여 만원을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실은 해당 학부모들이 국민권익위에 A씨를 신고하며 알려졌다.

권익위는 조사결과 A씨가 학부모들로부터 학교와 계약된 월급 외에 추가로 월급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

뢰했다.

경찰은 A씨가 학교와 1년 단위로 계약한 점을 미뤄 보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입건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혐의의 상당부분을 인정했다.

또한 경찰은 청탁금지법에서 받은 사람 뿐만아니라 금품을 건넨 사람도 처벌하기 때문에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체육계에서 학부모들이 감독에게 관공적으로 돈을 상납해왔다"며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이삼민 기자

국립전주대학교 전주한옥마을 유네스코 음식문화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